

도민들 '삼성 드림클래스 장학사업' 찬성

도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도민 89.5% 긍정 입장... 김승환 도교육감 부정적 입장과 정면 배치

전북도민 대다수가 김승환 도교육감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삼성 드림클래스 장학사업'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전북도의회 장명식 교육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실시한 '삼성 드림클래스 장학사업 관련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의회가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전북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직접설문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1.26%다.

여론조사 결과 도민 89.5%는 '삼성의 드림클래스 장학사업이 중학생의 학업 능력 향상과 대학생 학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각각 67.5%, 70.4%로 과반을 훌쩍 뛰어넘어 도교육청의 전면적인 입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명식 위원장은 "도민들은 삼성의 드림클래스 장학사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교육청은 도민의 요구에 따라 전향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8월19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삼성은 전국의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 과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주는데 이를 굳이 '선행'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 사업에 투입하는 돈은 모두 법인세 정산비용으로 처리되고 학생들에게 '삼성의 혜택'을 입는 자라는 의식을 심어준다"며 장학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나는 3년 전부터 도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왔다"며 "삼성이 성실한 납세와 투명한 기업회계 확립 등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면 도교육청도 삼성이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일부 학부모들은 "대기업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문제삼은 바 있다. /신광영 기자



4일 장명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89.5%가 '드림클래스 장학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호영, 남북교류협력위원장 선임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정호영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황현 도의장은 4일 오후 2시 도의정실에서 정호영 위원장과 정호윤·박재만·양성빈·최영규·이도영 의원, 그리고 김용만 도의회사무처장(당연직) 등 7명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새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도의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의 활동을 펼친다.

정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방에서 추진하던 교류협력사업도 중단된 상태이다"며 "남북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류가 필요한 만큼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첫 행선지로 전북 방문

국민의당이 지지를 받든을 노리며 텃밭인 호남을 연달아 방문한다. 특히 '전북 출대론'을 의식해 전북을 가장 먼저 방문할 계획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일 전북·광주·전남을 방문, 2017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는 이어 오는 10일 전주에서 비대위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영남권과 충청권도 돌아본 뒤 다시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합동 연설회를 통해 '세 물이 될'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가까운 시일 내 대형 지역 행사가 없어 지역 민심을 끌어올릴 필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최근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낮아진 점도 2주 연속 호남 방문을 결정할 개입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유권자 1,51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결기(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전주대비 1.9%포인트 하락한 3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더민주는 2.8%포인트 상승해 33.5%를 기록했다.

또 호남에서 안철수 전 삼임공공대표의 지지율도 같은 조사에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대표는 광주·전라에서 전주대비 5.6%포인트 떨어진 17.5%를 기록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응답률 25일 8.5%, 26일 8.3%, 27일 8.3%)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 안팎에서 '전북 출대론'이 제기되는 점을 의식해 첫 행선지를 전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5·18 전야제가 열린 지난 5월17일 오후 국민의당 20대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전북도청을 방문해 지역인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가 지나가는 길에 (전북을) 들르는 것이냐는 생각이 있다"는 날 선 불만을 듣기도 했다.

한 전북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위원장 연설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며 "현지 여론을 들을 수 있고 총선 이후 당세를 역전시켰어야 하는데 김수민·박선숙 사태로 당이 어려워졌으니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5·18 전야제 참석으로 전북을 짧게 들른 것을 두고 지역에서 '전북은 광주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래도 호남을 간다면 전북을 먼저 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직 사퇴

"원내수석부대표 업무에 충실하고자 한다"… 후임에 김광수 의원 거론

김관영(군산)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보냈던 지난 7개월과 4.13총선에서 도민 여러분이 국민의당에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기억하겠다"며 "이제 그만 전북도당 위원장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선택은 전북 발전에 힘쓰고 나아가 '열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루라는 도민의 뜻이었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사드배치, 추가경정예산, 검찰개혁문제 등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의 독단적 국정운영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치현실에서 도당 위원장직을 떠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원내 업무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도당위원장을 맡아 내걸었던 새만금개발 공약을 포함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공약'도 끝까지 책임지며 도민 여러분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광영 기자



한편 김 의원의 이번 사퇴에 따라 후임 도당위원장직에는 김광수(전주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이 지역 정치 1번지인 전주갑 지역구를 떼내다가 도의장을 역임해 지역현안 해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의견 때문이다.

김광수 의원의 도당 위원장 확정에는 중앙당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 다음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장 임기는 현재 국민의당 당규가 없기 때문에 미정이며 당분간 임시로 맡아 도당을 이끌게 된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개편안 시행시 "건보료 20% ↓ 효과"

공단 모의시험 결과... '모든소득'에 부과시 보험료율 4.87%로 감소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 보험료를 부과하면 건강보험료는 약 20% 인하되고, 보험료율은 6.07%에서 4.87%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더민주의 개편안과 같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추가로 249조8000억원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이 현재(2015년 기준)의 656조8000억원에 비해 38% 증가하게 된다.

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기반소득이 38% 확대돼 보험료율은 6.07%에서 4.87%로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가 2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2015년 건강보험 재정 결산 기준 건강보험 전체 수입은 총 51조4200억원으로 건강보험료 수입 44조3298억원(직장보험료 36조9548억원·지역보험료 7조3750억원), 국고지원금 수입 7조902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07%였다.

더민주안으로 동일한 규모의 보험료 수입을 얻기 위해선 '모든 소득'에 4.87%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된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 수입은 각각 42조5540억원, 8조8660억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6.07%에서 4.87%로 내려가고 현행보다 1.20%포인트 내려간 수치로 보험료가 20%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더민주안은 정부의 20% 법정지원 의무를 전제 한 것에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또 더민주의 개편안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보험료 인하 가구가 인상 가구에 비해 8배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2275만6200가구(세대) 중 보험료가 내려가는 가구는 2000만19619가구(87.9%)인 반면, 250만3008가구(11.0%)는 보험료가 오르고 24만3573가구(1.1%)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가입 가구 중에는 15.7%(234만18277가구)가 인상되고 84.3%(1263만6852가구)는 인하된다. 지역 가입 가구에서는 2.0%(15만4731가구)가 오르고 94.9%(737만2767가구)가 보험료가 내려간다.

더불어 전체 가구중 35.0%(796만3349가구)가 보험료 1만원~3만원이 인하되는 것

으로 예측했다. 뒤이어 5천원~1만원 인하가 19.0%(431만6629가구), 3만원~5만원 인하 9.8%(223만7327가구)로 나타났다.

이 세기간을 더하면 전체 2275만6200가구중 63.8%에 해당하는 1451만7305가구의 보험료가 5천원~5만원 인하되는 것이다.

반면 월 30만원 이상 보험료 인상 가구는 전체의 0.594%(13만5000가구)에 불과했다. 기준을 월 10만원 이상 인상으로 넓히면 전체 가구의 2.450%인 55만7499가구만 해당한다.

더민주의 건보료 개편을 주도한 김중대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들 세대의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했거나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냈던 가입자에게 개편안의 기준에 따라 새로 또는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어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대폭 오르는 세대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험료 상한제의 조정, 인상폭의 단계적 조정 등의 대책을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더민주안은 보험료 상한의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지난달 7일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뉴시스

국민의당, '우병우 추궁' 국회 운영위 소집요구

국민의당은 4일 새누리당을 향해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이당과 함께 우 수석이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날까지 국회 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 소집요구

박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우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인정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 수석 본인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수석의 결단,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우 수석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 수석은 "우 수석이 대한민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수석은 "우 수석이 대한민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로 대한민국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론하자 "운영위 출석은 시간벌기용"이라며 "운영위에 출석할 게 아니라 검찰에 출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시스

안호영 의원, 설천 하두교 재가설 예산 2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재난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설천 하두교량 재가설 공사에 필요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1983년 준공된 무주군 설천면 두갈리에 소재한 하두교량은 교량 폭이 협소해 차량과 농기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또 2015년 교량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판정을 받아 재가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조교부금 확보로 노후교량 재가설 및 확장으로 교통흐름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이번 특조교부금 2억원 확보로 재해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재해·재난으로부터의 주민안전을 위해 평균 20년 이상이 되어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큰 안·진·무·장 지역 노후교량 보수보강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남대 정상화' 놓고 유성엽-이용호 온도 차(?)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 정상화'를 놓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서남대 지키기를 강조한 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는 예결위원과 지역구 의원 등 10여명의 국민의당 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송하진 전북지사는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사격도 요청했다.

특히 의과대학 폐교 논란이 일고 있는 서남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유성엽 의원의 발언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유 의원은 "서남대의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사학 비리이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의 입장은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서남대 존재 문제보다 목표와 전략을 잘 짜서 의대만을 꼭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남대 자체 지키기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을 듣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서남대가 없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남대는 곧 의대인만큼 서남대도 지키고 의대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인정, '호남권 잡월드' 유치 필요

전북도의회 최인정 도의원(군산3)은 4일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관인 호남권 잡월드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15년 12월 진로교육법 시행과 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라 종합 직업체험관을 찾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인 호남권 잡월드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전북민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리적 접근성을 장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한지 문화체험, 119안전체험센터, 한옥마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독립영화제 등을 진로직업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켜 유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올해말 결정을 앞두고 전북과 가까운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이미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로 꼽히는 만큼 전북도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호남권 잡월드' 공모에 나섰고 9월 초까지 공모 신청을 마친 뒤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